

충남리포트 제140호

ChungNam Report

2014. 11. 26.

한·중 FTA 타결에 따른 충남 농업의 위기와 기회

강마야

충남발전연구원 농촌농업연구부 책임연구원, kmaya@cdi.re.kr

본 글은 한·중 FTA 타결내용에 따른 쟁점사항을 파악하고 충남 농업의 위기 및 기회요인을 도출하여 주제별 대응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요 약

- 금번 11월 10일 타결된 한중 FTA는 전체 협상결과가 공개되지 않은 상황이므로 성패를 논하기는 이르지만, 분명한 것은 농업분야는 직간접적 피해발생이 현재보다 더 가속화될 것으로 판단
- 한중 FTA의 농업분야 타결내용 및 쟁점사항은 다음과 같음
 - 한국측은 주요 548개 신선농축산물 품목(34%) 양허제외, 가공원료로 사용되는 관련 품목은 개방을 허용한 반면, 중국측은 한국의 주력 수출품목인 101개 품목(8.9%) 양허제외, 식량자급률 부족한 신선농축산물 품목에 대해서 개방을 허용한 절반의 성과
 - 쟁점사항은 가공품 수입에 따른 발작물 생산기반 위축 및 그에 따른 농가경영 악화, 원산지규정·위생 및 검역·식품안전성기준·지역화 등 비관세장벽 협상에 따른 추가영향 예상
- 충남 농업의 위기 및 기회요인을 다음과 같이 도출함
 - 위기요인은 중국산 가공식품 관세감축으로 인한 수입급증, 발작물 품목군 생산기반 위축과 농가경영의 위기
 - 기회요인은 발작물 품질경쟁력 제고 계기로 삼고 중국 농식품 시장 접근기회 가능성, 비관세장벽 활용전략 등
(단, 기회요인은 현실적으로 미미할 것으로 보임)
- 다음과 같이 충남 농정에 몇 가지 대응방안을 제안하고자 함
 - 단기과제로는 기존 자체사업의 재설계과정을 통해 충남 농가의 지속적인 경영 및 소득안정화에 직접 기여할 수 있는 대책 수립, 동시에 농업계 주체 간 합의과정 필요
 - 중기과제로는 발작물의 품질경쟁력과 소비활성화를 위한 충남 농정 역량 집중 투입(생력화, 품질향상 기술개발 등)
 - 장기과제로는 농정예산 집행방식의 변화를 통해 실질 수혜혜택이 농업인·소비자·농촌주민에게 귀결되는 구조 만들기, 소비자 및 민간진영과의 연대와 협력 강조와 실천

CONTENTS

〈요약〉

1. 한중FTA와 농업
2. 타결내용 및 쟁점사항
3. 충남 농업의 위기와 기회
4. 충남 농정의 대응방안
5. 중앙 농정에 제안사항

- 2014년 11월 10일, 중국 북경에서 개최된 한·중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은 한·중 FTA 협상이 실질적으로 타결되었다고 공식 선언함
 - FTA 공식협상에 돌입한 지 2년 6개월 만에 타결, 2단계 협상구조 채택
 - 협상문은 상품, 서비스, 투자, 원산지규정, 동식물 검역 등 22개장 구성
- 타결내용에 대한 현재 평가는 정부 및 일부언론과 농업계 시각이 엇갈리고 있고 전체적으로는 문호개방보다는 각국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얽힌 관계로 상품분야에서 자국 주력 산업 보호에 역점을 둔 미완성 FTA협정이라고 보는 게 지배적
 - 한국의 농수축산업과 중국의 제조업에 대한 양국의 상호민감성이 반영된 FTA 협상을 추진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판단
 - 결국 서비스·투자 분야(금융, 통신, 자연인의 이동, 투자)로 무게중심 이동
- 앞으로 가서명 및 정식서명 단계가 남아있고 협상내용이 전부 공개되지 않았으며 향후 기술적 사안에 대한 세부 협의가 있을 예정이기 때문에 현재 “실질적 타결”이라는 보도 자료만을 가지고 협상의 성패를 논하기에는 이롭
 - 전체 상품양허표와 품목별원산지결정기준(PSR: Product Specific Rules)¹⁾이 전부 공개되어야 정확히 알 수 있기 때문에 정부나 일부 언론보도와 같이 “실질적 타결인 만큼 농축산물 분야가 선방”했다는 낙관적 전망을 하기엔 무리

1) 주 : 각 품목별(HS code별)로 원산지 인정 요건을 규정한 기준. 원산지 결정기준 중 품목별 원산지기준은 해당품목에 한정하여 적용되는 기준으로 FTA관세법 시행규칙의 '별표'로 규정함(출처 : 관세청 FTA 포털)

- 분명한 것은 농업분야는 FTA 타결 이전부터 중국산 농축산물 수입이 이뤄져왔기 때문에
직·간접적 피해발생이 현재보다 더 가속화될 것으로 판단

● 현재 공개된 한중 FTA 개방안(양허계획서) 타결내용에 따른 쟁점사항을 파악하고 충남
농업의 위기 및 기회요인을 도출하여 주체별 대응방안을 모색코자 함

1) 타결내용

- 한중 FTA 성패 시각이 엇갈리는 가운데 한국측의 농축산물 양허안을 살펴보면, 양허제외를 포함한 자유화율(관세철폐율)에서 비교적 낮은 수준으로 타결됨
 - 전체 농축산물 1,611개 중 216개 품목만 관세가 즉시 철폐되고 나머지 양허제외 548개 품목을 제외한 847개 품목은 시간을 두고 점진적 개방
 - 일반품목과 민감품목의 농축산물 관세철폐율은 품목수 기준 64%, 수입액 기준 42%으로 타결, 주로 사료용·종자용·가공원료로서 중장기적 위기 품목
 - 초민감품목 중 ‘양허제외’ 품목은 관세철폐 제외대상으로 품목수 기준 34%, 수입액 기준 30%으로 타결하여 신선농축산물은 최대한 보호

[표 1] 한중FTA 한국측 농축산물 양허결과(품목수 기준)

양허유형		품목수(개)	비중(%)	주요 품목	구분
일반품목	즉시철폐	216	13.4	번식용 소·돼지·오리, 채소종자(토마토, 양배추, 무 등), 대두, 양모 등	한국측 위기 (단기)
	5년철폐	209	13.0	해바라기씨유(조유/기타), 조제식품류(오트밀), 우황, 식혜, 사향, 건빵, 면실유, 대두유, 옥수수박, 스파게티, 양조식초 등	
	10년철폐	164	10.2	코낙, 코코넛(기타), 베이커리제품(기타), 마요네스, 쿠키 및 크래커, 아몬드(탈각), 소나무(분재용) 등	
민감품목	15년철폐	202	12.5	해바라기씨유(정제유), 팜핵유, 망고스틴(신선/건조), 배합사료	한국측 위기 (중장기)
	20년철폐	239	14.8	도라지(신선/냉장), 데어리 스프레드, 채소류의 혼합물, 춘장, 기타 콩, 인삼차 및 인삼음료	

양허유형		품목수(개)	비중(%)	주요 품목	구분
초민감품목	TRQ	7	0.4	참깨(24,000t), 팥(건조/기타), 대두(콩나물콩/기타), 맥아, 고구마전분	중국측 관심품목 (중국의 대한민국 시장접근기회확대)
	부분감축	26	1.6	김치(조제저장처리), 혼합조미료, 기타소스(다대기), 들깨, 송이버섯(냉동)	
	양허제외	548	34.0	쌀, 보리, 감자, 신선 쇠고기·돼지고기·닭고기, 감귤류, 사과·배·포도, 마늘, 양파, 호박, 고추, 인삼류 등	한국측 보호
총합계		1,611	99.9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2014.11.10.)

● 중국측의 농축산물 양허결과를 살펴보면, 한국측 주요 수출품목은 대부분 양허제외, 일반품목과 민감품목은 대부분 신선농축산물로 채워짐([표 2] 참고)

- 전체 농축산물 1,131개 중 221개 품목 관세는 즉시 철폐되고 나머지 양허제외 101개 품목을 제외한 809개 품목은 시간을 두고 점진적 개방
- 일반품목과 민감품목의 경우 외형상 한국측의 기회라고 볼 수 있으나 대부분 자급률 100%에 못미치는 신선농축산물로 대중국 수출확대 가능성 낮음
- 초민감품목 중 ‘양허제외’ 품목은 한국측의 주요 수출품목인 설탕, 조제분유, 건조인삼, 밤 등으로 대중국 수출증대 효과 기대하기 어렵게 된 상황

[표 2] 한중FTA 중국측 농축산물 양허결과(품목수 기준)

양허유형		품목수(개)	비중(%)	주요 품목	구분
일반품목	즉시철폐	221	19.5	사료용 조제품, 잼·과실제리, 채소 종자 등	한국측 기회 (단기)
	5년철폐	65	5.7	단백질계 물질, 양모, 수모, 생사, 가축원피, 냉동 오렌지 주스, 복지 않은 커피	
	10년철폐	439	38.8	사과·배·포도·복숭아·딸기(신선), 쇠고기·돼지고기·닭고기(냉동), 소시지, 볶은 커피, 물 등	
민감품목	15년철폐	203	17.9	쇠고기·돼지고기·닭고기(신선), 파스타, 과일주스, 채소주스, 천연꿀, 가공치즈 등	한국측 기회 (중장기)
	20년철폐	101	8.9	김치, 무알콜 음료, 기타 조미료, 인스턴트 면류, 커피 조제품, 곡분 조제품, 간장, 발효주, 냉동 오리고기 등	
초민감품목	TRQ				중국측 보호
	부분감축	1	0.1	기타 조제식료품(20%→8.4%)	
	양허제외	101	8.9	쌀, 설탕, 건조 인삼, 밤(미탈각), 식물성 유지, 밀크와 크림, 밀, 밀가루, 당류 등	
총합계		1,131	99.8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2014.11.10.)

- 종합해보면 타결내용 외형만 봤을 때, 한국측은 주요 548개 신선농축산물 품목(34%)은 양허제외, 가공원료로 사용되는 관련품목 등 1,063개 품목(66%)은 개방을 허용한 반면, 중국측은 한국의 주력 수출품목인 101개 품목(8.9%) 양허제외, 식량자급률이 부족한 우리 신선농축산물 품목 1,030개 품목(91.1%)은 개방을 허용한 절반의 성과
 - 한국측의 신선농축산물은 개방대상에서 제외, 20년 이내 관세철폐 품목인 사료용·종자용·가공원료 품목 1,030개(64%)는 점진적 관세철폐 예정, 중국의 관심품목 33개(2%)는 TRQ와 부분감축으로 시장접근 기회 확대
 - 중국측은 우리의 주요 수출품목을 개방대상에서 제외, 국내자급률이 100%에 못 미치는 신선농축산물 1,029개 품목(90.9%) 위주로 점진적 관세철폐 예상, 한국의 관심품목인 기타조제식료품 1개(0.1%)만 부분 감축하는 결과

2) 쟁점사항

- 한중 FTA로 인한 충남의 농업분야 주요 쟁점사항은 다음과 같이 도출함
 - 가공품과 발작물 : 발작물을 이용한 가공품 수입증가로 생산기반 위축과 농가경영 악화
 - 원산지규정(PSR) : 완전생산기준과 실질적변형기준의 적용 문제
 - 비관세장벽협상 : 위생·검역, 식품안전성기준, 지역화 등 협상결과에 따른 추가 영향
- 농수축산물 품목수 기준 66%에 해당하는 품목은 관세철폐 혹은 부분감축(관세인하) 예정, 우회적인 방법(가공품)의 수입가능성으로 직간접적 피해 불가피
 - 중국산 신선농축산물이나 가공식품 원료는 한·중 FTA 타결 이전에도 이미 국내시장을 점령하고 있었던 만큼 현재보다 직간접적 피해 가속화 전망
 - 향후 기술적 사안 검토과정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FTA협상의 핵심인 원산지규정, 위생 및 검역, 지역화와 같은 비관세장벽 협상결과에 따른 추가 영향 예상

● 충남의 주력 품목별 타결내용에 따른 영향을 전망하면 다음과 같음([표 3]참고)

- 식량작물 : 콩, 감자, 고구마 등 중국산 가공원료를 이용한 가공형태 수입 증가 전망으로 생산기반 위축 불가피
- 과채류 : 단기적으로 급한 위기는 없을 것이나 가공형태 수입가능성 배제 못함
- 양념채소류 : 김치 관세감축으로 인해 해당품목 생산기반 위축 불가피
- 특작류 : 대부분 단기적으로 급한 위기는 없을 것으로 보이나 인삼의 경우 가공품(차, 음료)을 중심으로 수입급증이 예상됨에 따라 기반 위축
- 과일류 : 직접적인 피해는 없으나 가격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특성상 열대과일 관세철폐로 과일소비 체계의 대대적인 변화 예상
- 축산물 : 단기적으로 급한 위기는 없으나 육우와 젓소 등 즉시철폐로 한우 및 낙농업에 영향, 수입위생조건 검역협상에서 지역화 통과여부 관건
- 축산물기타 : 저렴한 가격의 사료시장 공략 가능, 위생기준이 충족되지 않은 중국산 사료를 먹일 경우 축산농가 및 소비자에게 간접적 피해 노출
- 가공식품 : 김치, 다대기, 인삼가공품의 10%이내 관세감축 및 관세철폐는 관련 품목류(양념채소류, 특작류)에 직접피해로 연결, 기반위축 원인 제공
- 단, 지금 소개한 내용은 현재 정부가 공개한 주요 품목 타결내용에 국한한 것이고 아직 공개하지 않은 품목에 대해서는 추가 피해발생 가능성 있음

[표 3] 한중 FTA에 따른 충남 주력 품목별 타결 내용과 영향

품목부류	주력 품목	타결내용	영향
식량작물	쌀	쌀 및 쌀 관련 16개 세 번 : 양허제외	단기적으로 급한 위기는 없을 것으로 판단
	콩	식용콩 : 현행관세유지 + TRQ 10,000톤 채유 및 탈지대두박용, 사료용 : 양허제외	· 수입의존도가 높은 만큼 기반붕괴 가속화 · 장기적으로 중국산 콩 이용한 가공품 수입 급증 예상
	감자	식용·칩용·종자용·냉동건조, 감자분, 전분 : 양허제외	단기적으로 급한 위기는 없을 것으로 판단
	고구마	냉동, 발효주정 : 양허제외 전분 : 현행관세유지 + TRQ 5,000톤	고구마를 이용한 가공품 수입 가속화
과채류	딸 기	양허제외 *기타딸기(나무,조제저장처리,쥬스) : 양허제외	단기적으로 급한 위기는 없을 것으로 판단
	토마토	신선,냉장, 쥬스 : 양허제외 조제저장처리, 케첩, 소스 : 20년 철폐 토마토 페이스트 : 15년 철폐	토마토를 이용한 가공품 수입 가속화

품목부류	주력 품목	타결내용	영향
	방울토마토	현재 공개되지 않음	-
	수박, 멜론	양허제외	단기적으로 급한 위기는 없을 것으로 판단
	오이, 호박	양허제외	단기적으로 급한 위기는 없을 것으로 판단
	깻잎, 양송이버섯	양허제외	단기적으로 급한 위기는 없을 것으로 판단
양념 채소류	쪽 파	건조파, 쪽파, 조제저장처리 : 양허제외	쪽파 이용한 우회적 가공형태 수입가능성 김치 관세인하로 쪽파생산 기반 위축
	고 추	신선, 건조, 고춧가루, 냉장·냉동 : 양허제외	김치 관세인하로 고추생산 기반 위축
	마늘	통마늘, 갠마늘, 건조마늘, 일시저장처리, 냉동마늘, 조제저장처리 : 양허제외	다대기 관세인하로 마늘생산 기반 위축
	생강	신선·건조·기타, 설탕저장처리 : 양허제외	김치 관세인하로 생강생산 기반 위축
특작류	인삼	인삼류 23개 주요 품목 : 양허제외 (단, 인삼차·인삼음료는 20년 철폐)	인삼 주요가공품인 차와 음료시장 개방으로 인삼생산 기반 위축 불가피
	밤	양허제외	단기적으로 급한 위기는 없을 것으로 판단
	표고버섯 구기자	양허제외	단기적으로 급한 위기는 없을 것으로 판단
	기타	도라지 : 20년 이내 관세철폐 참깨 : 현행관세유지+TRQ24,000톤 들깨 : 기존 관세 10% 감축(5년 균등) 참기름, 들기름 : 양허제외	·도라지 생산기반 위축, 한약재로서 중국산 도라지 수입 가속화 ·참깨 및 들깨는 현재도 중국산 수입의존도 큰 품목으로 향후 기반 붕괴
	꿀	천연꿀, 인조꿀, 로열젤리, 벌꿀조제품 : 양허제외	단기적으로 급한 위기는 없을 것으로 판단
과일류	배	양허제외	·바나나, 망고, 구아바, 두리안 등 열대과일 15년 이내 관세철폐 ·과일은 가격변동에 따른 소비대체성이 매우 강한 부류인 만큼 배·포도·사과소비 체계의 급속한 변화 초래
	포도, 사과	양허제외	
화훼류	국화	양허제외	단기적으로 급한 위기는 없을 것으로 판단
축산물	쇠고기	신선냉장·냉동, 식용설육 양허제외	·육우와 젖소 등은 즉시철폐로서 육우산업, 낙농업 및 한우산업 타격 ·향후 남은 수입위생조건 검역협상에서 지역화 통과여부가 가장 큰 관건
	돼지고기	냉장·냉동, 냉장기타, 냉동기타, 돼지가공품 : 양허제외 소시지 기타 : 15년 철폐	
	닭고기	냉동가슴, 냉동날개, 절단하지 않은 닭, 냉장육, 닭고기가공품, 삼계탕 : 양허제외	
축산물 기타	사료	사료용 근채류 : 양허제외 보조사료 및 배합사료(대용유) : 20년 철폐 배합사료(양돈, 양계, 어류 등) : 15년 철폐 기타사료 : 현행관세유지 + TRQ38,000톤	·저렴한 가격으로 사료시장 공략 가능 ·축산농가 및 소비자에게 간접 피해(사료안 전성)는 축산물 품질에 영향
가공식품	김치	기존 관세의 10%이내 감축	·현행 관세 20%에서도 요식업체 중심으로 중국산 김치일반화(수입 8위) ·관세감축으로 수입가속화 전망 ·관련 양념채소류에 직접적 영향
	다대기	기존 관세의 10%이내 감축	·마늘생산기반 위축
	땅콩가공품	피넛버터 : 20년 이내 관세철폐 조제저장처리 : 기존 관세 10%감축(5년균등)	땅콩이 고율관세(230.5%)임에도 불구하고 중국산 땅콩 이미 잠식한 상황으로 땅콩생산기반 위축
	인삼가공품	인삼차·인삼음료 20년 이내 관세철폐	·중국내 인삼품질고급화 전략 진행 중 ·차와 음료를 시작으로 한국시장 진출에서 유리한 고지 점령 가능성

주 : 음영처리 품목은 충남의 상위 주력품목, 본 내용은 연구자의 주관적 판단 하에 작성하였음을 밝힘

1) 위기요인

- 주요 신선농축산물은 양허제외했지만 초민감품목 중 TRQ(Tariff Rate Quota : 관세율 할당)²⁾와 부분감축은 중국의 관심품목(33개)으로서 대부분 발작물이자 예전부터 가공원료로 사용하던 품목으로 한국시장 접근기회 확대가능성을 높여놓았고 중국산 가공식품 수입 증가로 충남 발작물 생산기반 위축 가능성³⁾
- 중국산 농식품 수입형태가 신선농축산물을 뛰어넘어 가공품 위주의 빠른 재편, 통관절차 간소화로 인해 개방수준 가속화, 가공품 수입에 따른 피해 우려⁴⁾
 - 중국 신선농축산물 및 가공품은 FTA타결 이전에도 이미 국내시장에 많이 진입한 상태이고 FTA로 인한 관세인하 없이도 매년 증가하여 왔음
 - 김치, 기타소스(다대기), 인삼차·인삼음료 등 중국산 가공식품 수입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충남의 해당품목류(양념채소류, 특작류)에 직접적 영향 초래
- 중국산 농축산물 및 가공품 위생수준이 검증되지 않은 상황에서 FTA를 통한 수입에 따라 위생·검역 등 비관세장벽 협상은 충남의 축산업 발전방향 관건
 - 충남 축산업의 가축질병 청정 유지를 위해서 향후 조율과정에서의 SPS협정(Agreement on the application of sanitary and phytosanitary measures: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

2) 주 : 동일품목임에도 일정 수량별로 세율을 차등 부과하는 제도로서 일정수량 범위 내에서 저율의 관세를 부과하고 이를 초과하는 수량에 대해서는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는 이중세율 제도를 말함(출처 : 관세청 FTA포털)

3) 자료 : 어명근 외(2014), 한·중FTA 타결과 농업 부문의 과제, KREI 농정포커스 제98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4) 자료 : 매일경제(<http://www.mk.co.kr/>), 농민신문(<http://www.nongmin.com/>)

에 관한 협정) 중 지역화 조항⁵⁾, 위생 및 검역 기준에 대한 협상결과에 대한 예의주시 필요

- 농업 타결내용은 생산자 입장에서만 위기가 아니라 충남의 소비자 입장에서 중국산 농축산물 및 가공식품에 대한 안전성·신뢰문제를 위기로 볼 수 있음

2) 기회요인

- 충남의 발작물 생산기반 위축을 오히려 전화위복 차원에서 충남 농정방향의 우선순위로 배치하여 품질경쟁력 제고할 수 있는 재도약 기회로 삼아야 함
 - 중국측 양허안에 따라 즉시철폐 해당품목은 충남도 중국시장에 대한 접근기회가 확대되었음을 의미함에 따라 지혜롭고 적극적 활용하는 전략 필요
- 중국 내 고소득 계층의 소비성향에 대하여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차원의 면밀한 조사·분석·정보공유를 통해 중국 농식품시장 접근기회 확대⁶⁾
 - 중국내의 고소득 계층도 자국산 농식품의 품질과 안전성에 대한 불신이 있는 상태에서 한류바람을 타고 세련된 한국 이미지를 활용한 고품질 농식품을 문화와 연계하여 수출할 수 있도록 정부와 단체 간 협력 기회로 활용
- 소비자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서 식품안전성과 관련된 사안은 매우 조심스럽고 까다로운 기준을 적용해야 하는 만큼 향후 품목별 수입위생조건 협상시 위생 및 검역, 지역화 등 비관세장벽을 한국측에서도 역으로 활용하는 기회 마련

5) 주 : 지역화란 가축 질병 및 병해충 등의 발생범위를 국가가 아닌 지역범위로 보는 것을 말하고 중국은 자국산 농축산물의 수출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협상에서 WTO/SPS 협정 수준의 지역화(회원국은 병해충 안전지역과 병해충 발생이 적은 지역의 개념을 인정한다)를 이상의 지역화에 강력히 반대하였음.

6) 자료 : 어명근 외(2014), 한·중FTA 타결과 농업 부문의 과제, KREI 농정포커스 제98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원산지규정은 불명확성, 복잡성, 차별적 적용가능성으로 FTA마다 다른 규정을 적용하면서 무역장벽으로 존재하지만 이해 및 활용정도에 따라 또다른 기회로 작용 가능
 - 신선농축산물 : 해당 국가에서 완전하게 생산된 것만 인정하는 완전생산기준 적용
 - 가공식품 : 소주 등 세번변경기준⁷⁾, 라면·소시지·햄·캔참치 등 부가가치기준⁸⁾으로 원재료에 상관없이 생산공정이 국내에서 이뤄지면 국내산
 - 원산지규정을 잘 이해하고 활용하는 것에 따라 관세인하 혹은 무관세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됨

- 기회요인은 현실적으로 미미한 게 사실이나 식품안전성 관심 고조, 고품질 농축산물 수요 증가 등 소비자 변화는 오히려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는 계기

7) 주 : 수입되는 원료의 세번과 완제품의 세번을 비교해 세번이 일정 단위 이상으로 변하는 경우에 원산지 인정


8) 주 : 상품의 부가가치가 일정비율 이상 발생된 국가를 원산지로 정함

- (단기) 기존 자체사업 재설계과정을 통해 충남 농가의 지속적인 경영 및 소득안정화에 직접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대책 수립, 농업계 주체의 합의과정 필요
 - 충남 자체사업 규모 비중이 큰 벼경영안정직불금('14년 예산기준 286억 원) 및 맞춤형비료 지원사업('14년 예산기준 215억 원)과 같은 제도 재설계
 - 제도 통합화, 목적 명확화, 공익형 성격지향, 농가 상호의무준수조건이행 강조, 기존 보조사업 재정비에 대한 농업계 주체 간 합의과정 절차
- (중기) 발작물의 품질경쟁력과 소비활성화를 위한 충남 농정역량 집중 투입
 - 발작물은 생산자 입장에서 타품목과 달리 노동투입이 많은 품목군으로서 농업인구 고령화 및 감소화 추세 속에서 점차 생산기반 위축되는 현실
 - 소비자들은 여전히 중국산 농축산물과 가공품에 대한 불신이 높기 때문에 국내산 고품질 농축산물에 대한 수요는 계속 존재하고 증가할 전망
 - 효율성 향상 위한 기술개발, 생력화방안, 품질향상 위한 농가별 지원대책 중점
- (장기) 충남차원에서 기존 농정예산 집행방식의 변화를 도모하여 농업인에게, 소비자에게 실질적 수혜혜택으로 귀결되는 방식을 가장 중요한 대원칙으로 함
 - 충남 농정예산 중 도비·시군비 비중은 약15%에 못 미치고 중앙집권 성격이 강한 분야가 농정분야인 만큼 지방정부 역할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현실
 - 농정예산의 관리·감독도 중요하지만 효율성과 형평성 원칙에 따른 집행방식의 변화를 통해 실질 수혜혜택이 직접적으로 농업인·소비자·농촌주민에게 귀결되는 구조로 만들어서 최종적으로 농가경영 및 소득안정화 달성 주력
 - 소비자 및 민간진영과 연대·협력 중요성이 강조됨에 따라 정책으로서 실천

- (국회비준과 공식발효까지 아직 시간이 남았다) 향후 국회비준동의안 절차에 따른 소요 기간 동안 국내 및 지역 대책을 알차게 수립하는 시간으로 활용
 - 중앙과 지방정부는 그간 FTA 경험에 비추어 봤을 때 국회비준동의안 통과부터 발효까지 최소 1년~최대 5년이란 소요기간을 최대한 활용
 - 타결문에 ‘향후 양허제외 품목에 대한 양허포함 논의를 지속한다’라는 내용이 포함됨에 따라 금번 양허제외된 품목도 앞으로 협상대상 가능성 존재

- (단기일내에 투명한 정보공개, 중장기적으로 불법유통 차단해야 한다) 현재 주요 품목만 부분 공개되어서 정확한 피해규모 산출과 대책 수립 불가능한 상황, 약 1,000여개의 미 공개 품목에 대한 개방수준과 일정, 원산지규정 공개 필요
 - 양국이 구체적 양허표는 최종 타결 때까지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고 하나 간접소비 대체 관계에 있는 품목의 피해규모 산출과 중장기 관점에서 농업의 지속가능성과 성장 담보할 수 있는 대책 수립을 위해서 정보공개 필요
 - 실제 보따리상을 경유해 불법유통되는 중국산 농축산물에 대한 차단 시급

- (기존 FTA보완대책 성격과 달라야 한다) 금번 한중FTA는 산업·경제적 측면의 FTA라 기보다는 최근 중국 및 글로벌 정세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상황에서 타결된 FTA이기 때문에 개별품목 중심의 대책은 실효성이 부족할 것으로 판단
 - 중국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학적 관계, 지정학적 요소, 한·중·미·일 정치요소, 사회주의 국가라는 특수성을 고려한 포괄적 구상과 대책이 중요하고 특히 중국 내 농축산물 주산지 육성전략, 최근 동향과 실태분석 파악 필요

- (하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고 넘어야 할 산이 더 많다) 4월8일 한·호주FTA 정식서명, 9월23일 한·캐나다FTA 정식서명, 11월15일 한·뉴질랜드FTA 타결 소식이 들려오는 등 농업계는 현재 타결된 FTA 및 협상준비중 FTA 16건 등 앞으로 넘어야 할 산이 더 많음 

강 마 야 책임연구원
충남발전연구원 농촌농업연구부
041-840-1210, kmaya@cdi.re.kr

◆ 참 고 자 료 ◆

관세청FTA포털(<http://www.customs.go.kr/kcshome/site/index.do?layoutSiteId=ftaportalkor>)

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2014.11.10)

농민신문(<http://www.nongmin.com/>)

매일경제(<http://www.mk.co.kr/>)

어명근 외(2014), 한·중FTA 타결과 농업 부문의 과제, KREI 농정포커스 제98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4년도 충남리포트

구분	제 목	집필자	발행일
2014-01	동아시아 철새 보전, 서천갯벌에 달렸다	정옥식	2014.01.01
2014-02	통합브랜드 구축으로 도시의 경쟁력을 높인다	이충훈	2014.01.09
2014-03	충남의 협동조합, 정체성을 높이고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할 수 있어야	송두범	2014.01.21
2014-04	이제! 유역주인이 참여하는 물자치 시대이다	이상진	2014.01.27
2014-05	활력 넘치는 전통시장 되살리기, 상품권 사용 활성화가 필요하다	이민정	2014.01.28
2014-06	조류인플루엔자(AI) 관리 대책, 예방이 최우선이다!	정옥식	2014.02.11
2014-07	지원·참여형 문화소외계층 정책으로 충남형 문화복지시책을 추진하자	이인배	2014.02.13
2014-08	FTA를 수출확대의 기회로 삼아야	김양중	2014.02.20
2014-09	사라지는 농촌마을! 한계(限界)마을정책 도입해야	조영재	2014.02.25
2014-10	2014년 충남경제 전망과 시사점	김양중	2014.02.28
2014-11	다기능농업을 활성화하자	이관률·정현희	2014.03.06
2014-12	충청남도 벤처기업 현황과 발전방안	임형빈	2014.03.13
2014-13	충남 고령자 교통안전 대책이 필요하다	김원철	2014.03.27
2014-14	충남형 주민자치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정책과제	최병학	2014.04.03
2014-15	충남의 행복지표와 정책 연계 방안이 필요하다	고승희	2014.04.16
2014-16	충남 논의 생물상 및 생물다양성 증진 방안	정옥식	2014.05.08
2014-17	2040년 읍면동 인구 추계로 본 충남의 정책과제	임준홍·홍성호	2014.05.15
2014-18	내포광역도시권 형성을 위한 지역간 연계·협력 추진 방안	오명택·김정연	2014.06.12
2014-19	충남의 미래 성장을 견인할 자동차부품산업	김양중	2014.06.19
2014-20	민선6기 충남도 및 기초자치단체 당선자 공약 분석	송두범	2014.06.24
2014-21	자살예방을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	이수철	2014.07.14
2014-22	지역을 위한 농협 혁신 성공 전략	이호중	2014.07.16
2014-23	대등하고 협력적인 중앙·지방간 재정관계 정립을 위한 제도개선	이정만·고승희	2014.07.17
2014-24	충남 보육정책 진단과 공공성 강화 방안	최은희	2014.07.21
2014-25	충남 자동차부품산업의 기술도약을 위한 정책과제	김양중	2014.07.23
2014-26	충남 협동조합의 조직화와 공급생태계 조성의 필요성	장종익	2014.07.28
2014-27	충청남도 자기주도 행정체계의 지속적 관리방안	주운현	2014.07.30
2014-28	충남 정책 키워드(3농혁신, 사회적경제)의 SNS 데이터 분석	임화진	2014.07.31
2014-29	프란치스코 교황의 충남 방문 의미와 향후 과제	유병덕·최영화	2014.08.05
2014-30	충남 자동차부품기업 기술개발 지원제도의 개선방안	김양중	2014.08.07
2014-31	내포지역의 정체성 정립과 추진과제	박철희	2014.08.11
2014-32	한국 경제의 새로운 성장전략 모색과 민선6기 충남의 발전 방향	김찬규 외	2014.08.21
2014-33	지방 3.0 시대, 충남 재정정보공개의 의미와 과제	정창수	2014.09.11
2014-34	분권형 초광역자치의 필요성과 과제	김순은	2014.09.16
2014-35	충남경제의 선순환을 위해 분공장 경제 탈피가 필요하다	박 경	2014.09.18
2014-36	충남 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벤처투자금융 활성화 방안	김홍기	2014.09.23
2014-37	충청남도 행복기움지원단 활성화 방향과 과제	김용현	2014.09.25
2014-38	균형발전을 위한 지역발전등급제 도입과 지역별 차등지원 방안 제언	변창흠	2014.09.30
2014-39	충청남도 주민자치를 위한 동네거버넌스 실천과 전략	안성호·곽현근	2014.10.02
2014-40	지역 중심의 에너지시스템 전환을 위한 정책과제	이상헌 외	2014.10.08
2014-41	충남의 산업단지, 공공디자인으로 새롭게 변신해야 한다	이충훈	2014.10.16
2014-42	충청남도과 중국 허베이성(河北省) 간 교류협력 활성화 방안	박경철	2014.10.17
2014-43	농촌의 에너지자립, 산림바이오매스에서 찾다: 일본 산림구원대 활동	박준섭	2014.10.30
2014-44	일본 내발적 발전의 도시형 사례와 시사점	이민정	2014.11.06
2014-45	충남 지역 현실이 반영된 교통수요분석 DB 구축과 관리 필요	김형철·김원철	2014.11.12
2014-46	수요응답형 교통체계(DRT)의 이해와 도입방안	김원철·유준일	2014.11.20
2014-47	한·중 FTA가 충남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	김양중	2014.11.26

■ 충남발전연구원 홈페이지(www.cdi.re.kr)에서 쉽게 볼 수 있으며, 인용시 출처를 정확히 밝혀주세요!

■ 본 연구보고서는 충남발전연구원의 자체보고서로 발간된 것이며, 충남도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